

기업인 대상 최신 반부패 정책 자료집(2026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청렴·윤리 경영 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신 주요 반부패 정책 자료집을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 내용 (총 5건)

- ① "청렴하고 윤리적인 기업 경영", 포상으로 지원하고 제도로 뒷받침한다 ('26.2.26.)
- ② "공익신고와 부패신고, 어떤 신고를 하셔도 가장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26.3.10.)
- ③ "청렴도 어떻게 높일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워크숍 개최 ('26.3.10.)
- ④ "인공지능 결합한 국민신문고, 사용 한 달"... 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 되고 있어 ('26.3.11.)
- ⑤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맞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설명회 개최 ('26.3.12.)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정책·정보 → 부패방지 자료실 → 청렴정책)

■ 문의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044-200-7614)

“청렴하고 윤리적인 기업 경영”, 포상으로 지원하고 제도로 뒷받침한다

- 국민권익위, 2025년 청렴윤리경영 유공기업으로 대화제약, 정식품, 노루홀딩스 등 3개 기업 선정
- 청렴윤리경영 평가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추진…오는 3월 23일까지 입법예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5년 한 해 청렴윤리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민간 영역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기업들 가운데 ‘대화제약’, ‘정식품’, ‘노루홀딩스’ 등 3곳을 유공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2022년부터 도입된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을 통해 공공·민간의 자율적인 부패예방 역량을 강화해 왔고 특히, 2025년에는 중견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민간 영역의 반부패 노력 내실화에 주력했다.

□ 먼저, ‘대화제약’은 경영진이 주도하는 CP 실천 체계를 확립하고 온·오프라인 소통 채널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환류 시스템을 운영했다.

그리고 ‘정식품’은 기업 전반의 부패리스크 관리체계를 가동하고 관련 인적·재정적 자원을 지원하여 청렴문화를 안착시켰으며, ‘노루홀딩스’는 그룹 차원의 통합적인 윤리가치 체계를 정립하고, 부패취약분야를 점검·개선하여 청렴윤리경영 체계를 구축했다.

□ 이와 더불어, 국민권익위는 국정과제 16-3번 ‘글로벌 반부패 경쟁력 및 국가청렴도 제고’ 과제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번 유공기업 선정과 함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입법예고 기간 : 2026. 2. 9. ~ 2026. 3. 23.

이번 개정안은 청렴윤리경영을 향한 자발적 노력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청렴윤리경영 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수준에 머물렀던 기존의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기관 내 부패예방 전담부서 설치 근거 마련(안 제3조의2 신설), ▲국민권익위의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평가 및 지원 업무 명시(안 제12조 제8호의2 신설),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제도 운영기관에 대한 평가, 포상 및 지원 근거 마련(안 제28조의2 신설) 등이 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민간 영역에서 청렴이 경영의 핵심 가치임을 보여준 모범 사업장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현재 국민권익위가 추진하고 있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아 청렴윤리경영 시스템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공익신고와 부패신고, 어떤 신고를 하셔도 가장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 국민권익위, 현재 반부패 법률간 상이한 신고자 보호 제도를 가장 높은 수준의 신고자 보호제도에 맞춰 통일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 추진
-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오늘(10일) 국무회의 의결, 국회 제출 예정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오늘(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오늘 의결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3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각각 공익신고자와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를 두고 있었으나, 두 법률 간 입법 시차로 인해 신고자 보호 규정에 차이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신고자 보호 규정 차이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익신고와 부패신고 모두 신고자가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두 법률의 규정 중 신고자 보호 수준이 두터운 각 규정에 따라 통일하였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추가(개정안 제17조 제1항), ▲공익신고자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제도 신설(개정안 제22조의2) 등이 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신고자를 알아내려는 시도.신고 방해.신고취소 강요 행위에 대한 신고자 불이익조치 발생 추정 규정 추가(개정안 제63조), ▲부패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규정 신설(개정안 제66조 제5항) 등이 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주요 내용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
보호조치 신청요건	(현행)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 신청 가능 (개정)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보호조치 신청 가능 (개정안 제17조 제1항)	←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 가능(제62조의2 제1항)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해당 규정 신설 (개정안 제22조의2)	←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제62조의5 제1항)
불이익조치 추정	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신고 방해, 신고 취소 강요가 있는 경우 등에도 불이익조치 발생 추정(제23조)	⇒	(현행)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만 불이익조치 발생 추정 (개정) 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신고 방해, 신고취소 강요가 있는 경우 등에도 불이익조치 발생 추정 (개정안 제63조)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제14조 제5항)	⇒	해당 규정 신설 (개정안 제66조 제5항)

- 이와 더불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모두 내부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 국민권익위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에 추진하는 법률 개정은 신고자 보호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국

회의 법률안 심의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차질없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청렴도 어떻게 높일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워크숍 개최

- 국민권익위, 580개 기관 대상 2026년 종합청렴도 평가 워크숍 개최
- 기관 유형에 따라 2회 실시…오늘(10일) 중앙행정기관·광역지자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12일 기초지자체·국공립대학·공공의료기관·지방의회 대상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10일)과 12일 양일간 2026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관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2026년 새롭게 개편된 종합청렴도 평가체계와 평가지표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기관별 중점 추진사항 안내, 우수사례 공유, 질의응답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2026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 워크숍 일정 >

일자	대상	장소
3월 10일(화)	중앙행정기관(49), 광역지자체(17), 교육청(17), 공직유관단체(146) 등 229개 기관	대전 한국철도공사 대강당
3월 12일(목)	기초지자체(226), 국공립대학(33), 공공의료(13), 지방의회(79) 등 351개 기관	대전 한국철도공사 대강당

□ 특히, 올해 워크숍에서는 지난해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공의료기관 및 교통·도시철도·시설관리 관련 지방공사·공단과 평가범위가 확대된 국공립대학교를 대상으로 기관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맞춤형 평가지표를 공유한다.

아울러 기초의회 중 작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내실화, ▲수의계약 등 이해충돌방지제도 자체점검, ▲공무 국외 출장 운영 규정 마련 등 지방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 평가지표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미래세대 청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관련 평가지표를 설명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협조도 함께 요청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는 워크숍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4월 말 ‘2026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을 확정하고, 11월까지 평가를 진행한 후 12월에 최종 평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총 58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청렴도 감점 영역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기관별 종합청렴도 등급이 확정된다.

-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청렴도 평가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고 공공기관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소통의 장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평가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반부패 정책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인공지능 결합한 국민신문고, 사용 한 달”... 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 되고 있어

- 국민권익위, 오늘 ‘인공지능 탑재한 국민신문고’ 활용기관과 간담회 개최
- 업무 활용 관련 개선점 및 발전방안 등 자유롭게 의견 교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11일) 국민신문고에 시범 도입한 ①민원답변 초안 제공, ②빈발 민원 일괄처리 등 인공지능 기능을 활용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국토교통부·인천광역시·경기도 시흥시와 함께 현장활용 경험과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이 더욱 빠르고 정확한 민원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에 인공지능을 탑재하여, 지난 2월 5일부터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을 시작해 약 한 달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지능이 관련 법령, 기존 민원 사례 등을 분석하여 민원 질의에 대한 답변 초안을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제시하는 ‘인공지능 민원답변 추천 서비스’를 이용하고,

국토교통부·인천광역시·시흥시는 유사한 내용의 민원을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식별하고 하나의 민원 처리 단위로 묶어 처리할 수 있는 ‘빈발·중복민원 일괄처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민신문고 인공지능 기능을 활용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4개 기관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업무 활용 과정에서 경험한 개선점 및 발전방안 등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민원답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의 답변 초안이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민원 학습데

이터 개선을 통한 답변 품질 개선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인천광역시·경기도 시흥시는 특정 논점에 대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을 인공지능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며, 향후 지속적인 인공지능 학습과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민신문고로 들어오는 민원 데이터를 토대로 인공지능이 포착한 주요 논점을 각급 기관에 공유하고 담당부처와 지방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실제 업무에서 인공지능 기반 민원 서비스를 활용하면서 얻은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는 1,407개 기관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올해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시스템을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맞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설명회 개최

-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맞아 ‘찾아가는 청렴 소통 릴레이 설명회’ 개최…제도 운영성과 공유 및 교육 현장 맞춤형 사례 중심 설명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교육현장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12일)부터 5월 28일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 소통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한다.

- 설명회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제도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의 핵심 내용과 주요 사례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 ※ 청렴소통 릴레이 설명회 주요 내용: ▲청탁금지법 10년의 성과 및 최근 주요 쟁점별 판례유권해석, ▲운동부 운영, 방과후 학교 등 교육현장 맞춤형 실제 사례 중심 설명, ▲메신저·문자·SNS를 통한 청탁 등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사례, ▲현장 질의응답 및 건의사항 청취 등

- 이번 설명회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순회하며 총 17회에 걸쳐 진행된다. 또한, 유튜브 생중계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시·도교육청 여건상 대면 참석이 어려운 참가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부패방지국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소통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릴레이 설명회가 교육계 전반에 청렴 문화를 더욱 확

산시키고, 선생님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돕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